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제604호

지면안내

03

사회
시설물 관리의 허점이 만든 안전 균열

05

사람사
지구에 숨결을 불어넣다

06

학술
6,600km 떨어진 거리의 분쟁

08

광고
제39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학사구조개편, 2025학년도부터 적용 예정

학사구조개편이 지난달 24일 e-class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됐다. 이번 학사구조개편으로 ▲모집 단위 정원 조정 ▲모집 단위 조정 ▲학과(부) 신설 ▲트랙 명칭 변경 ▲트랙 모집중지 등이 이뤄졌다.

먼저 상상력인재학부(주)의 정원이 확대되며 타 모집 단위의 정원이 조정된다. 정부에서 권고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반영해 본교의 상상력인재학부(주)의 모집 정원이 119명에서 175명으로 56명 확대됐다. 확대된 인원만큼 근 2년간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이 선택한 학부의 비율을 산정해 해당 학부의 모집 정원을 감축시켰다. 주·야를 합해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3명) ▲사회과학부(18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6명) ▲ICT디자인학부(8명) ▲IT공과대학(11명)의 인원만큼 모집 정원이 축소됐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근 2년간 수치가 앞으로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이 트랙으로 선택할 단과대학의 대략적인 비율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부의 모집 단위는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으로 변경된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 처장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는 사회과학부라는 하나의 학부만 존재하기에 IT공과대학과 같이 모집 단위를 학부가 아닌 단과대학으로 통일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인대학에서는 계약학과인 ‘영상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와 ‘인테리어디자인학과’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트랙과 인테리어디자인트랙에서 계약학과 운영 의사를 밝힌 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신설이 이뤄졌다. 최은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영상애니메이션콘텐츠 트랙 측은 대학의 수익 극대화와 더불어 학과 맞춤형 직업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인테리어디자인트랙의 경우 사무 공간 및 기타 상업 공간 디자인에 대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처장은 “계약학과 운영을 희망하는 교수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유학생 전담학부인 ‘글로벌인재학부’가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다. 해당 학부 산하에는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글로벌K비즈니스전공 ▲영상엔터테인먼트전공 ▲패션뷰티크리에이션전공 ▲SW융합전공을 둔다. 해당 학부는 소속 단과대학 없이 학부만 독자적으로 신설됐다. 조 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교에서 교육을 받고 좋은 실력을 갖춘다면 본교의 위상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 작년부터 학부 신설을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 트랙 선택부터 6개의 트랙 명칭이 변경된다. 우선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의 벤처경영트랙(주·야)이 비즈니스애널리틱스트랙(주·야)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 더불어 경영학 이론에 치우쳐져 있던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데이터 분석 위주인 애널리틱스 교과목의 비중도 높아진다. 이동주(사회과학부) 벤처경영트랙 주임교수는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의 경영 전문가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트랙의 교육 과정 변경에 대해 2022년도 트랙 교수들과 논의를 거쳤으며, 당해 말 소속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디자인대학의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트랙(주)은 미디어디자인트랙(주)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허지윤(ICT 3) ICT디자인학부 학생회장은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업으로도 이뤄진 트랙이기에 변경된 트랙명이 더 많은 교육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며 “명칭 변경으로 해당 트랙이 광고에 적용되는 마케팅 기법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대를 이

끌어낸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대학의 브랜드·패키지디자인트랙(주)은 시각디자인트랙(주)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 명칭 변경에 따라 교과목명에 변화가 생기지만 교육과정은 기존과 비슷하다. 전신종(ICT디자인학부) 브랜드·패키지디자인트랙 주임교수는 “브랜드·패키지는 시각디자인 안에 속한 세분화된 전공”이라며 “교과목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트랙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허 학생회장은 “트랙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학생회 차원에서 카드뉴스 및 특방 공지 등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알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IT공과대학의 기계설계트랙(주·야)은 기계시스템디자인트랙(주·야)으로 트랙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과정에서는 개별 교과목의 시스템 통합적 접근법을 다룰 예정이다. 기계설계트랙의 이상열(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일부 교과목의 삭제 및 변경은 있을 것”이라며 “기계시스템디자인이라는 트랙명은 역학 기반의 설계지만 단순한 기계 부품을 넘어 전체 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 등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준(기계전자 3) 기계전자공학부 부학생회장은 “기존 명칭은 설계에 국한된 이미지이지만, 기계시스템디자인트랙은 설계뿐 아니라 기계 시스템의 종합적인 분석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를 포괄한다”며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최근 산업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IT공과대학의 기계자동화트랙(주·야)이 AI로봇융합트랙(주·야)으로 명칭 변경된다. 기계 계열의 전공자들도 기본적인 AI 관련 지식을 배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어 관련 기존 교과목에서 AI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루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변화가 생긴다. 기계자동화트랙 소속의 김민구(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트랙제로 인해 기계시스템공학과가 기계설계트랙과 기계

자동화트랙으로 분류됐다”며 “두 트랙 모두 ‘기계’가 들어가지만 기계자동화트랙은 컴퓨터 설계 관련 교육 및 로봇, 무인 시스템 등 자동화 시스템 교육을 중점으로 뒀기에 기계설계트랙과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자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남 부학생회장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와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변경된 명칭이라며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T공과대학의 지능형제조시스템트랙(주·야)이 응용산업데이터공학트랙(주·야)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 교육과정에도 데이터리터러시, 데이터분석 언어, 데이터 마케팅 등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들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박현성(산업시스템공학부) 지능형제조시스템트랙 주임교수는 “산업 데이터 분석과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해당 분야의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휘(산공 4) 산업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은 “산업시스템공학부는 공과대학의 타 학부에 비해 학생 인원이 적다”며 “학부 명칭이 자주 변경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집중지된 트랙도 존재한다. 한국어교육트랙(야)이 글로벌인재학부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전공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트랙 선택부터 한국어교육트랙(야)의 정원 모집이 중지된다. 한국어교육트랙(야)은 『트랙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해 야간트랙의 재학생 수 40명을 넘지 못해 모집중지가 결정됐다. 이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제6차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기존 한국어교육트랙(야) 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해당 트랙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대학본부 측은 한국어교육트랙(야)을 희망하는 야간 학부 학생들도 한국어교육트랙(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코로나19 해제 후 첫 실기고사 실시



▲실기고사 종료 후 학교를 나서는 사람들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실기고사(이하 실기고사)가 12·13일과 20일에 걸쳐 실시됐다. 12일은 예술학부(무용, 회화), 13·20일은 ICT디자인학부 학생 선발을 위한 실기고사가 진행됐다. 모집인원은 총 120명이며 지원인원은 3,442명으로 28.6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탑구관 ▲낙산관 ▲상상관 ▲한성여자중학교에서 실기고사가 진행됐다.

이번 실기고사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도 교내 출입이 가능했다. 수험생 및 수험생 학부모 등 모두가 교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상상파크 ▲카페 ‘오프’ ▲상상관 1·2층 ▲이마트24 등의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ICT디자인학부 실기고사를 응시한 조혜연(18) 수험생은 “실기고사를 치르기 전 학교를 봤을 때 깔끔한 인상을 받았다”며 “시험을 응시하며 준비했던 것을 펼치고 나올 수 있어 시원섭섭한 느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당신의 마음, 글로 전해보세요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해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실기고사서 시험자료 지연 배부



▲상상관 지하 체육관에서 ICT디자인학부 수험생들이 실기고사를 응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ICT디자인학부 기초디자인 실기고사(이하 실기고사)에서 일부 수험생에게 보조 자료인 제시어 관련 이미지 사진(이하 이미지 사진)이 40분가량 뒤늦게 배부된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해 본교 입학처는 16일 '수시 실기고사 관련 경과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문제는 제17고사실에서 발생했으며 총 1,908명의 실기고사 응시생 중 24명이 해당 고사장에서 실기고사 시험을 치렀다. 대학본부는 형평성에 이상이 없도록 평가를 진행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문제는 고사실 감독관의 착오로 발생했다. 실기고사에서는 시험 문제지와 함께 제시어 소재의 조형적 특징을 드러내는 이미

지 사진이 배부돼야 하지만 감독관이 이를 누락한 것이다. 시험이 시작된 11시 정시에 감독관이 제시어가 기재된 시험 문제지를 배부했으나 30분이 지난 후 이미지 사진이 배부되지 않았음을 인지했고, 입사관리본부의 확인을 거쳐 11시 40분경 이미지 사진을 배부한 상황이었다. 감독관에 대한 사후 조치는 대학본부 차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입학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입학처의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실기고사 평가위원에게 실기고사 시험시간은 총 4시간이며 제17고사실에서 40분이 지난 이후 이미지 사진이 배부됐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수험생 답안 화지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타 고사

실에서 응시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입학처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 학년도 실기고사 실시 결과를 종합·검토해 개선사항을 매뉴얼과 사전 교육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기고사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과 고사장별 현장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입학처장은 "이번 ICT디자인학부 실기고사에서 이미지 사진이 지연 배부된 사고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사과드립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교직원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본교 교수조합 출범

지난달 19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이 출범했다. 교수조합은 교권 보호와 나아가 대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지난달 6일에 열린 '한성대학교 교수조합 창립총회(이하 총회)'를 진행한 뒤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교수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내부 논의 끝에 올해 총회를 거쳐 설립이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수조합 규약(이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이 논의됐다. 본교의 교수 단체인 '교수협의회'와 '교수회' 등과 달리 교수조합은 대학교 내에서 노동조합법상으로 인정되는 교원 단체다.

규약에 명시된 교수조합의 목적은 ▲한성대학교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의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조합원의 권의 보호와 복지 증진 ▲대학의 공공성 확보 및 학문 발전에 기여 등이다. 교수조합은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귀옥 교수조합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은 본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인 전임교원으로,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귀옥(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부위원장으로 김용식(사회과학부) 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 한 명이 선출됐다. 사무국장은 이호신(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가 위원장의 임명에 따라 보직을 담당하며, 감사는 박성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가 역임한다.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와 달리 대학교와의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조합이 최근 출범했기에 전임교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교수조합의 목적에 맞춰 대학본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52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한성대학교 52주년 개교기념식(이하 기념식)'이 미래관 DLC에서 지난 4일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문동후(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총장, 정철영(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 등 교내 외 인사들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참석 내·외빈 소개 ▲문동후 이사장 축사 ▲이창원 총장 기념사 ▲장기근속자 포상 ▲한성발전공헌상 포상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2부는 내·외빈 및 참석 구성원들의 식사가 케이크인 한상과 교직원식당에서 진행됐다. 장기근속자 포상은 이병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박두용(기계전자공학부) 교수, 강상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등 15명이 수상했다. 한성발전공헌상은 이은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김윤주(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장영우 총무처장, 김동근(지역청년고용팀) 팀장 등 77명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이 총장은 기념사에서 "첨단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로 함께 결의했다.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인재 육성의 도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및 AI 교육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미래한성연구원' 신설됐다

본교의 부설기관으로 '미래한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신설됐다. 연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과의 협동 업무를 통해 본교의 가치와 정체성을 높일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지역 연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원이 신설됐다.

연구원 산하에는 ▲미래서울연구소 ▲브랜딩디자인연구소 ▲지역평생교육연구소를 두고 있다. 미래서울연구소는 서울 지역

문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을 담당하며, 브랜딩디자인연구소는 대학의 이미지 형상화에 도움이 되는 슬로건 등의 정비를 맡았다. 지역평생교육연구소는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신설은 지난 8월 30일 이뤄진 제9차 교무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후 9월 26일에 개최된 제4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칙에 반영

됐다.

대학본부 측은 이번 연구원 신설이 앞으로 대학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연구원 산하 연구소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추후 진행될 지역 혁신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 등을 대응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제보하기

작은 소식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tel : 02)760-4186

e-mail : hansungnews@gmail.com

address :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kakao 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시설물 관리의 허점이 만든 안전 균열

10월 21일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30주기다. 1994년 금요일 오전 7시 40분경 강북 성수동과 강남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하며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대교 건설·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는 평가가 씌워졌다. 사고 발생 전 대교 곳곳에서 균열이 확인됐으며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빗발쳤다. 그럼에도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결과가 나타나며 보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건축·구조물 붕괴 및 화재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시설재난'은 약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붕괴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063건, 1,625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방청의 「화재통계」 중 건축·구조물 화재 발생 현황은 2020년 24,929건, 2021년 23,997건, 2022년 25,426건으로 시설재난 발생 빈도는 끊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채진(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발생하던 시설재난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을 의미한다.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인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사회재난은 붕괴, 폭발 등의 인위로 인한 사고가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고를 일컬으며 국가 재산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재난은 과거부터 발생하던 사고지만 인적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형태를 갖는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신종 대형재난'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초고층 건물과 지하 심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사고 규모가 방대해지고 도시 인구 밀집으로 인해 시설재난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김소윤(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도시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와 복합화 등으로 인해 시설재난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화된 시설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방식에 허점이 존재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관리 당국

의 지휘하에 용역업체가 진행하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기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주로 육안검사에 의존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첨단 기술을 사용해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시설물 점검이 정기안전점검으로 이뤄지는데 순찰 형태로 진행되는 육안검사만으로는 시설물의 내부 균열이나 부식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제도개선 방안」에서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졌음에도 육안검사 미흡으로 인해 '정자교 인도부'와 '도림 보도육교'가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임동균(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육안으로 시설물을 점검할 경우 시설물 구조 내부에 산재한 위험을 점검하기 어려워 위험 요소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주체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시설물 안전점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관리당국이 현장 안전 점검을 용역업체에 일임하고 있지만 안전을 점검하는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밀점검을 진행하는 용역업체가 경쟁입찰로 선정되면서 비용적인 측면만이 고려되고 용역업체 인력의 자격, 경력 등을 토대로 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용역업체가 가격 경쟁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인력의 안전 점검 자격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 이후에도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D·E 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지만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시설물 안전등급 D/E 등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설물 중 안전등급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과 불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 개수가 2022년 660개, 2023년 688개, 2024년 663개로 드러났다. 이는 안전 취약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채 교수는 "시설물 점검이 진행됐음에도 시설물 안전등급 D·E 등

급을 받은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시설물 관리당국이 국가 기반을 이루는 시설물 보수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공건축·구조물은 국가 기반시설이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에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점검과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노후화된 국가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전체 인프라 시설 383,281개 중 사용연수가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51.2%인 196,325개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물의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재난의 위험 요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물 점검이 대부분 육안으로 진행되는 문제는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법에 구체적인 점검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5항에서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지만, 점검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과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인 육안 검사만으로 외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시설물안전법에는 개괄적인 점검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육안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며 안전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

부 내에 용역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재차 평가할 담당자가 없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용역업체가 점검을 진행하더라도 점검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점검 사항을 결정할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용역업체에 안전 점검 사항을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안전점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임 교수는 "용역업체 점검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점검한 사항을 재차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물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성능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25억 원이 지원됐으나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안전관리 예산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핵심 자원이지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시설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구체적인 안전점검을 규정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정기안전점검 시 육안검사가 가능한 부분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각기 다른 점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취약 부위에는 시설물 엑스레이(X-ray) 촬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육

안검사 외에도 기술을 활용한 정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내에 안전점검 전문가를 담당자로 배정하고 이 담당자가 용역업체의 점검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제시된다. 용역업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용역업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서 미흡한 점검 과정을 보완하고 점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김 교수는 "안전점검 당국에서 용역업체의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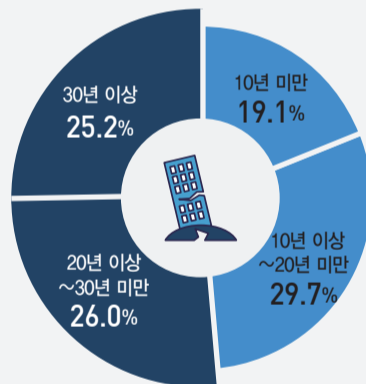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시설물 관리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물이 사유 재산에 속하지만 시설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인기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안전취약시설을 방치할 경우 건축물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관리당국이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된다. 임 교수는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안전등급 미흡 이하의 시설물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재난상황이 발생해야 재난예방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재난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결국 재난 대응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설문조사와 같은 일회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등의 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형태로 의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 교수는 "지역의 특성과 시설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시민이 재난 대응체계 마련 과정에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면 안전관리를 이롭고 동시에 시민안전의 식까지도 제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기반시설별 사용연수 현황



*대상 : 15종 기반시설 383,281개
*기간 :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녹색 띠, 그린벨트 해제

지난 8월 8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해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이어진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약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오는 11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자 영구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뜻하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도시 주변을 떠 모양으로 둘러싼 녹지대를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 및 도시인구증가 억제 ▲도시 주변 환경 보호 ▲군사적 목적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현재 전국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5,397㎢으로 국토의 5.4%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 면적은 149.13㎢으로

서울 전 지역 면적의 24.6%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집값이 함께 올라 그린벨트 해제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대적으로 5㎢ 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해제 지역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집값이 상승한다면 실질적인 주거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주택 무소유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속화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불신을 갖게 한다. 김동환(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경준(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몰려있는 불평등 구조"라며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이 이뤄져도 수요 충족과 가격 안정화라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투기가 조장된다는 점이다. 투기 조장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돌고 있어 많은 이들의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부족한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지만, 한편으로 투기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토지를 개발한다는 점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설한다면 소규모로 개발이 이뤄져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적용이 어렵다.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상승한 토지의 가격으로 자신이 얻을 이익을 반영해 집값을 높게 책정한다. 박정은(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투자 재원이 적게 소요되며 투자 자본의 회수가 빨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해당 방식으로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전 일부 후보 지역에 대해 환경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투기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제 후보 지역에 대한 토지의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환경부의 환경평가가 진행된 후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투기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윤은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직접 해당 토지 건축물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이뤄진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로 인한 이익을 온전히 자신의 이익으로 삼지 못하기에, 해당 토지의 가격을 급격히 올릴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이 토

지를 개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면 해당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조사 지역 또한 일부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해 투기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유력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상황을 주시해 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구역이 확대돼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 : 토지 개발 시 급등한 토지 가격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일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입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편집자주〉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 이자율 최대 19.9%’ 장기카드대출 서비스인 ‘카드론’의 이자율이다. 카드론은 신용카드를 통해 담보 없이 소액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대출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대출이 증가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도 불어났다. 통화량은 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관리가 필요하다.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대출에 따른 통화량 관리 이론과 카드론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살펴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굽을수록 쌓여가는 빚더미, 카드론

맡겨진 자금, 늘어나는 화폐의 양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는 ‘금융시장’ 내에서 자금을 유통한다. 금융은 경제주체 사이에서 현금 등의 자금이 오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금융시장은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금융시장 내에서는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이 거래되고 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채’가 발생한다.

금융시장 내에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동향은 경제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 다양한 경제주체 사이에서 금융자산이 활발하게 유통되거나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양상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드러낸다.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자본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주영(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금융시장 내에서 금융자산 및 부채가 오가는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경제 규모가 큰 경향을 보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 전체를 이해하고 미래 경제 전망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다.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지하며 거래를 이루는 시장을 일컫는다. 알레로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주식 시장이 있으며,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그 자금이 특정 기업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 수요·공급자가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직접 금융시장과 달리 거래 당사자가 자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간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예시인 은행은 자금 수요·공급자 간 거래를 이어주는 ‘금융중개’ 기능과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내는 ‘예금창조’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중개를 통해 은행은 급전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빌리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에게 전달한다. 은행은 자금 수요·공급자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자금 수요·공급자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 자금도 거래할 수 있다.

예금창조는 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특별한 화폐의 공급 없이 새롭게 화폐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은행의 예금창조는 대출 과정에서 예금된 화폐를 일정 부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경제주체와 거래하기에 발생한다. 중앙은행이 현금 100만 원을 발행하고 가계A(이하 A)가 이를 온전히 소유한다고 가정하자. A는 시중은행에 현금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100만 원을 예금한다. 시중은행은 100만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시중은행은 A가 예금한 돈 전부를 출금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A가 돈을 찾으러 올 경우 지급할 일부만을 남겨놓고 다른 경제주체인 가계B(이하 B)에게 대출해 준다. 이 과정에서 남겨둔 자금의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 부른다. 시중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30%로 설정했다면, 은행은 30만 원을 보유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B에게 대출한다. 이때 A가 예금 100만 원과 B에게 대출된 화폐 70만 원, 총 170만 원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며 화폐가 창조됐다.

은행의 예금창조로 인해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등의 현상을 유발하기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여러 경제주체와 대출을 거듭할수록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중앙은행은 통화량 관리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통화량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처음 발행한 화폐인 ‘본원통화’와 은행을 거치며 증가하는 통화량의 비율인 ‘통화승수’를 조절할 수 있다. A가 소유하기 전 중앙은행이 처음 공급한 화폐량인 100만 원이 본원통화에 해당하며, B와 그 외의 여러 경제주체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며 불어난 정도가 통화승수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이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식과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양, 지급 준비율 등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관리한다. 양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을 높이고 시중은행 대출의 양을 줄이며 지급 준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건전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를 통해 통화량을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 내부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온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이때 ‘이자율’이 경제 상황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 이자란 자본을 사용한 한도에 맞춰 지급하는 대가로 자본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이다. 이자율이 오르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리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급 준비율은 감소한다. 개인과 기업은 이자를 받기 위해 시중은행에 예금하려는 경향을 띠고, 이는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증가시키며 본원통화의 조절까지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화량 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구분한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며 통화승수와 화폐 공급량도 변화한다. 반대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이 온전히 통제 가능하기에 이자율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중앙은행은 다양한 외부 요인을 분석해 이자율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통화량을 설정한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동하는 이자율 및 통화량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찾아 시장의 적정 이자율을 결정한다.

통화량과 이자율은 물가와 소득 등 국민 경제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에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대출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관리하려 한다. 양 부연구위원은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은 물가안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여오는 부채의 올라미

최근 장기카드대출 서비스인 ‘카드론’을 통한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카드 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8월 기준 카드 대출금액은 총 44조 6,6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카드론 대출 현황은 총 38조 7,880억 원으로 카드 대출 중 86.8%를 차지했다. 여효성(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카드론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마지막 대출 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카드론 대출 증가는 금융권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론 대출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관련 채무조정 절차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29일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 5,7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인 16만 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이기환(인하대학교 금융투자학과) 교수는 “카드론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한계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채무조정 확정자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상황이 어려워 카드론 대출(이하 대한대출)을 활용해 다시 카드론 부채를 상환하는 ‘빚 돌려막기’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대출의 본 목적은 평균 이자율 13%에 달하는 카드론 상품 가운데서 비교적 낮은 이자율의 카드론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던 카드론의 부채를 탕감하지 못해 대한대출로 부채를 재조정하려는 양상이 확인된다. 여신금융협회의 「전업 8개 카드사 월별 이용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대한대출 잔액은 약 1조 8,79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700억 원 증가했다. 여 교수는 “일부 대출자가 카드론 이용 후 상황에 어려움을 겪어 빚을 빚으로 막으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론으로 인해 청년층의 신용유리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카드론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신용유리자는 속히 신용불량자로 불리며 경제적으로 신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지만 변제 가능성을 내포한 채무조정 절차와 구분된다. 청년층이 카드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가입을 유지하기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이 의원실의 「최근 3년간 상품별/연령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리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5,887명으로 2021년 5만 2,580명 대비 3년 새 25.3% 증가했다.

카드론 대출 증가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는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카드론 대출 판매를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기반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높아져 신용접수가 필요 없는 카드론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신용 바탕의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등이 주로 사용하는 ‘여신’ 상품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카드사의 상술이 제기된다. 대한대출 역시 카드사의 상품에 해당한다. 카드사는 이미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품인 대한대출을 사용하도록 장려해 실적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가입절차가 진행된다. 이 교수는 “대한대출을 받는 시점은 기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당시의 상황과 차이가 있으나, 신용도와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상품의 제공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카드론은 위험성이 큰 제2금융권 대출로 알려져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미흡해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카드론은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이 발급함에도 평균 이자율 13%로 제2금융권 상품에 해당한다. 제1금융권은 금리가 낮지만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해 안정성이 높은 반면 제2금융권은 중앙은행의 관리를 받지 않아 금리가 높고 예금자 보호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카드론을 통해 대출할 때는 신용점수가 평가되지 않으나 대출 이후에는 개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된다. 청년이 금융교육 부재로 인해 카드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금감원이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신용카드 판매 취급 비중을 계획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시중은행은 경제상황과 개인의 신용점수, 가계의 연체금 등을 고려한 카드론 대출 한도와 상품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재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전망될 때 금감원의 제재가 가해지면 관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카드론 대출 한도 규제와 카드사의 신용판매 취급 비중을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해결방안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계대출자인 개인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등 균형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검증절차 없이 대한대출을 제공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대한대출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대두된다. 카드사가 대한대출 상품을 제공할 때 신용 등에 따라 대출 자격을 검증하고 대한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 교수는 “대한대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자격 심사 등의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자산 운용 및 부채 관리 방법을 학습하면 카드론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더욱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 교수는 “금융교육을 통해 카드론과 같은 고위험 대출 상품을 남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통해 금융 습관까지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쓰레기 덜 버리지’ 누구나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럼에도 쓰레기 관련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제기된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그동안 익히 들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발간된 국제학술지 <랜싯>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매년 900만 명이 사망한다. 이 수치는 연간 전체 사망자의 6분의 1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 있다. 바로 청년 환경단체 ‘지구 지키는 배움터(이하 지지배)’의 홍다경(27) 대표다. 그는 뮤직비디오 제작, ‘제로웨이스트 선거’ 운동 등 지지배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청년에게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말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쾌적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환경 보호란 무엇일까. 청년으로서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그를 만났다.

홍 대표가 본격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등학생 때부터였다. 그는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직시하고 대구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매일 다량의 음식물이 폐기 처분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일부러 배식을 가장 늦게 받고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사진을 찍어서 교육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교육감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고민했죠. 그래서 추가 배식이나 잔반 포장, 음식물 나눔 등의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시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홍 대표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학교에서는 ‘잔반 쿠폰제’가 시행됐다. 잔반 쿠폰제는 배식을 받은 후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쿠폰은 1개당 천 원으로, 쿠폰을 모아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다.

“교육감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이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왔어요. 당시 학교에서는 모든 잔반을 폐기하고 있었어요. 잔반 전량 폐기를 바랄 수는 없었지만 이후 학교에서 잔반 쿠폰제가 시행됐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으니까 스스로도 행복하고, 자신이 받은 쿠폰을 누군가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점도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잔반 쿠폰제 시행은 제가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이를 위해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홍 대표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고등학생 시절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벤자민인성영재학교라는 대안학교였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퇴 후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도전을 하다 보니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대안학교를 찾아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봤다. 이후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개인 그림 전시회 개최, 세계시민교육 스피치 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홍 대표는 내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제 진로를 찾고 싶어서 벤자민인성영재학교를 가게 됐어요. 삶의 목적을 찾고 싶었던 거죠. 흔히 자퇴를 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자퇴해도 자신에게 의지와 목표가 있으면 충분히

지구에 숨겨진 폐기물은 어디다



사진 제공 : 홍다경

성공을 이뤄낼 수 있어요. 전시회에서는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그림을 선보였어요. 세계시민교육 스피치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상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교육감에게 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주체적으로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2016년, 벤자민인성영재학교를 졸업한 홍 대표는 뉴질랜드로 봉사활동을 갔다. 해외로 가면 지금보다 더 확장된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표적인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는 쓰레기 문제를 목격했다. 이는 홍 대표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뉴질랜드에서는 가축을 전부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가축의 배설물이 하천으로 흘러나가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분리배출을 거의 하지 않아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주방장에게 이야

기했는데도 주방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의 실태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대응책이 있는지 생각했어요.”

1년간의 뉴질랜드에서의 봉사활동 후 2018년 한국으로 돌아온 홍 대표는 전국의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당 시기 우리나라는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 결정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재활용품 수거 중단이 몇 달 동안 이어지며 쓰레기 대란을 겪은 직후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자 홍 대표는 사람들이 버린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전국의 쓰레기 선별장, 소각장, 매립지로 향했다.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하루에 50톤가량의 쓰레기가 와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직접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죠. 하지만 그 많은 쓰레기를 적은 인력으로 선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50톤의 쓰레기를 하루에 다 처리하려면 작은 재활용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선별장의 재활용률이 20~30%밖에 되지 않

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쓰레기 문제의 실태를 목격한 홍 대표는 환경보호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이끌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다짐이 청년 환경단체 지지배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저는 보안 슬랫이라는 인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청년으로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류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재활용 방식을 발표했어요. 이후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 2013년 비영리 민간단체 ‘오션 클린업’을 설립했죠. 이를 통해 저 혼자만이 했을 때보다 단체가 움직였을 때 급격히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지배는 2017년 12월 환경 동아리로 시작했어요. 쓰레기 공청회나 토론회에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청년에게 나눠주고 함께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모임이기 때문에 지지배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이후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하겠다는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구성원을 모

집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바뀌었죠. 지금은 약 170명의 활동가가 다양한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배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길 바랐어요. 이들이 향후 지지배의 리더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를 기대하기도 했어요.”

지지배 활동을 하며 홍 대표는 도서, 영상 등 환경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환경 문제 중 그가 뮤직비디오와 서적의 콘텐츠로 선택한 소재는 ‘쓰레기 산’이었다. 쓰레기 산이란 쓰레기가 쌓인 곳이 마치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쓰레기 산은 쓰레기 불법 투기업자들로부터 생겨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배출자가 불법 투기업자에게 돈을 주고 폐기물을 맡겨요. 그럼 투기업자들은 사업을 한다고 속여서 땅을 임대한 뒤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치죠. 나중에 이 광경을 발견한 토지 주인은 그 땅을 쓰지도 못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해요. 결국 토지 주인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홍 대표의 시선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로 향했다. 그는 선거 운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2년 동안 제로웨이스트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그는 선거 운동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후 지지배의 구성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쓰레기 없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이 12만 8,000장, 벽보와 공보물 등이 약 85억 장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길이가 길어 현수막 안에 염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환경보호 정책을 얘기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 공보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온라인 공보물화였어요. 요즘은 수도 요금도 온라인으로 받는 추세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선거와 관련된 자료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친환경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선거 유세 차량을 전기차로 보급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 대표는 앞으로도 환경 관련 콘텐츠 제작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환경과 밀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장기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그는 젊은 세대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미래의 지구를 위한 일이라고 전한다.

“우리나라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생태 체험 위주의 환경 교육을 기획했어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행동하며 깨닫는 방식이 훨씬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홍 대표는 청년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권한다. 나아가 단기적인 행동이 아닌 장기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단기적인 행동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학교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고민한 다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행동이 단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환경을 위한 변화를 촉구한 덕분에 스펀의 플라스틱 뚜껑이 사라진 것과 같은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해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6,600km 떨어진 거리의 분쟁

이란-이스라엘 분쟁이 가져올 경제 위기의 신호탄

‘즉시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한 뒤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송된 문자 내용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 공격 등 높은 수준의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 속 두 나라 간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의 분쟁은 유가 상승을 초래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악재로 평가받는다.

지난한 싸움은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이슬람 혁명’에서 시작했다.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기 전, 약 250년 동안 이란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1921년 쿠데타를 통해 이란을 통치하게 된 팔레비 왕조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서구식 교육, 정치 탈종교화 등의 근대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여성 참정권 부여, 하잡 착용 금지 등 이슬람교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반이슬람적인 행보는 국민들의 불만을 낳았고 이슬람 혁명위원회의 수장인 루홀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호메이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올랐으며, 종교계가 권력을 잡게 됐다. 황의현(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은 “혁명 후 이슬람 정부는 여성의 하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축출하며 종교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혁명 이후 이란은 강경한 반서구, 반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냈다. 농촌의 해체로 인한 빈부격차와 석유 수출을 통한 재정이 특권층에만 쏠리는 등 팔레비 왕조가 유발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미국과 서구를 이슬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세로 규정했다. 서구의 대표 주자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국가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중동 내에서 친미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국가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혁명 후 반미 성향을 띠게 된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됐다. 이후 1992년 이스라엘대사관 폭파, 1994년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친선협회 건물 테러 등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됐다. 김혁(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여겼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은 이란의 ‘건국이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양국의 분쟁이 전면전의 양상을 띠지 않은 이유는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서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등의 국가가 있어 두 나라 간 직접적인 충돌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일명 ‘그림자 전쟁’을 이어왔다. 강문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중남미) 부연구위원은 “그림자 전쟁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국가를 중심으로 대신 전쟁을 치르는 양상을 띠었다”고 밝혔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은 일명 ‘저항의 축’을 조직했다. 저항의 축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반이스라엘 단체로, 이란에서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저항의 축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대표적 세력이 바로 ‘헤즈볼라’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후원하는 레바논의 반이스라엘 정당이다. 레바논 의회 총의석 128석 중 13석을 차지할 만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유는 1982년 갈릴리 평화 작전에 기인한다. 이 작전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저항 운동을 펼치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공격하기 위해 레바논을 침공한 사건이다. 당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레바논 내에서 만들어진 조직 중 하나가 바로 헤즈볼라다. 한새롬(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논했다.

이란의 핵 보유 또한 양국의 갈등 심화의 원인 중 하나다. 2005년 이란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무드 야마디네자드는 당선과 동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했다. 그는 이란의 대표적인 반이스라엘 강경파 정치인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핵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상황을 피하고자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핵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이란의 핵 전문가를 암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란의 핵 보유를

견제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스라엘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보유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시리아 내전은 알아사드 대통령과 그를 끌어내리려는 반군 간의 내전이다. 이때 이란은 시리아에 정권인 대통령 측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자극했다. 이란, 레바논, 시리아는 같은 저항의 축 세력이기 때문에 시리아를 향한 이란의 지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충분히 위협의 소지가 됐다. 황 선임연구원은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최근 몇 개월 사이 직접적인 공격의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진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이란은 저항의 축을 이끄는 국가로서 대응이 필요했다.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대응할 때 이란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저항의 축이 약화되는 것을 방조한다는 의미가 때문이다. 또한 헤즈볼라가 약화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단도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일 미사일 공격을 통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맞대응에 나섰다.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 선임연구원은 “대외적 정당성과 국가 위신을 지키기 위해 서라도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가 대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이란, 러시아, 중국은 3군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노다솔(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연구교수는 “강대국의 개입에 따라 양국의 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불리는 이란이 보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현상 또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의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2주 기준 국제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1.1% 상승했고, 국제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11.4% 상승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추출되는 원유인 두바이유 역시 전주 대비 11.4%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다. 한 교수는 “유가 상승은 세계 에너지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방해할 경우 심각한 유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남쪽에 위치한 해협으로, 이곳을 통해 이동하는 원유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중동 석유 수출의 핵심 통로다. 황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전 세계적인 물류와 원유 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되고, 경제적 악영향도 클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유의 활용이 주요한 ▲정유 ▲화학 ▲도로운송 ▲항공운송 분야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대한석유협회의 「국별 원유도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69.2%에 달한다. 노 연구교수는 “천연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천연자원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잠재적인 요소”라며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대국의 개입에 따라 양국의 분쟁 양상이 달라지며,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축량 확대, 가격 헤지 등의 방식이 검토된다. 노 연구교수는 “유가 상승과 대립전 확대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국제정세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야파 : 이슬람 제국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분파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서서히 젊어져 가는 당뇨병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당뇨병이 젊은 세대에 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4」에 따르면 국내 19~39세 청년의 2.2%가 당뇨병을 유병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청년이 21.8%로 조사됐다. 이은영(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과거에는 50~60대가 당뇨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20~30대에서도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않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생기는 질환이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량과 수분 섭취량, 식사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변량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섭취한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해 공복감이 심해져 식사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유순집(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당뇨병 초기에는 소변량과 이에 따른 과도한 수분 섭취와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없어 혈당 상승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의 과도한 섭취나 운동량 감소 등의 후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 젊은 층의 생활 습관이 당뇨병 환자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이병(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최근 고지방 음식이 많아지고 운동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 보니 비만에 의한 당뇨병 발병 빈도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형태의 당뇨병은 어떻게 발생할까. 우리가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포도당은 세포 내부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하나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부를 떠돌게 되면 고혈당 상태가 유지된다. 포도당이 몸속 세포 내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인슐린의 작용 능력과 관련 있다. 인슐린은 혈당이 오르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체장에서 분비된다. 인슐린이 당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몸속 세포와 반응해야 한다. 그래야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면서 혈당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관표(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을 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정상치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때 세포가 정상적인 인슐린 작용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체장은 세포 밖에 남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인슐린의 과분비가 반복되면, 결국 체장은 과부하에 걸려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떨어져 버린다. 김상수(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체장이 지쳐 인슐린 분비가 무너지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당뇨병은 혈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위험하다. 혈관 합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해 손상된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유발돼 생기는 질환이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독성을 띠기 때문에, 혈관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고농도의 포도당 배양액에 세포를 넣으면 세포가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며 “고혈당 상황에서 혈관들이 쉽게 손상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혈관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뉜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주로 눈, 신장,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으로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장 질환 ▲당뇨병성 신경 병증 등이 있다. 대혈관 합

병증은 심장, 뇌, 다리 등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주는 합병증으로 ▲심근경색 ▲뇌경색 ▲말초동맥질환 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당뇨병 발병 원인으로 비만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4」에 따르면 청년 당뇨병 환자에서 87%가 비만, 8%가 과체중으로 정상체중인 환자는 5% 수준이다. 청년의 비만은 야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다. 고 교수는 “최근 당뇨병 유병률은 제자리걸음이지만, 청년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며 “이는 젊은 연령의 비만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청년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등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초기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요구된다. 박 교수는 “혈당이 조금 올랐을 때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수시로 건강검진을 해보거나 몸에 이상을 느끼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간단한 혈당 검사를 해볼 것”이라 조언했다.

허윤호 기자 heo109r@gmail.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무관심 교육감 선거 대가 치를 수도

그야말로 '무관심 선거'였다. 사전투표 전 후보자토론회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23.5%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해 진행된 보궐선거였다. 기존에는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한 반면, 이번 보궐선거는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진행됐다. 『공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대학생에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비단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교육감은 초·중·고교 및 사교육 관련 정책을 주로 관할하기에 대학생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권이 대학생에게 주어지지만, 투표율이 미미한 이유도 이 부분에서 비롯됐을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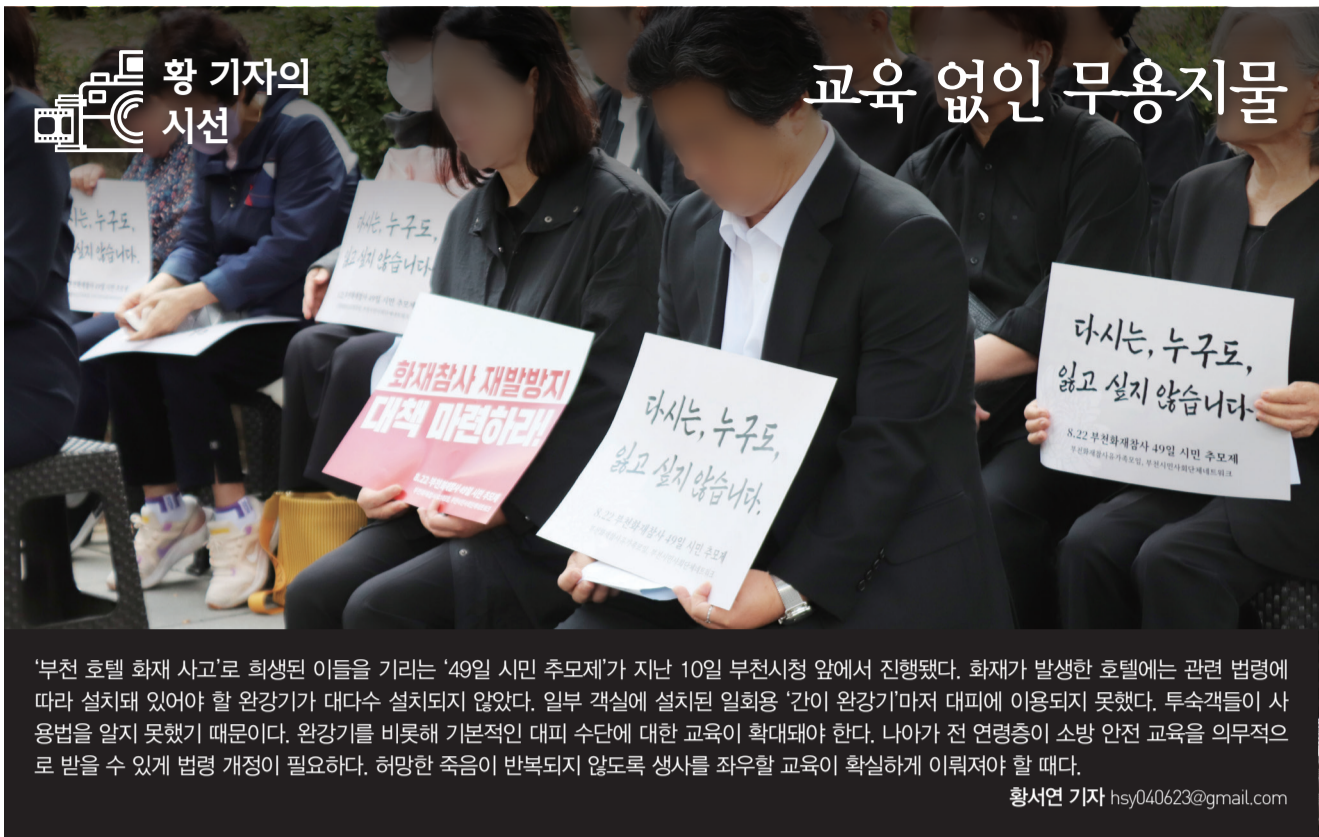
현재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초·중·고에 약 74조 원이 배정된 반면, 대학에 배정된 교부금은 12조 원에 불과하다. 양측 예산의 간극은 커져만 간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이런 문제도 직시할 수 있다.

교육감 보궐 선거도 다른 선거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의 올바른 대학 사회 수립과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초·중·고등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올바른 대학사회 수립이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는 기득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그려나가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부모세대보다 비교적 최근에 교육과정을 겪은 대학생이 현역 초·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과정도 관할하지만,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온통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공약이다. 직업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평생교육원 관련 정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미래의 청년 세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된다.

대학생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대학생을 위한 공약 및 정책이 늘어나려면 청년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처럼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청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대학생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김유성 편집국장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49일 시민 추모제’가 지난 10일 부천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돼 있어야 할 완강기가 대다수 설치되지 않았다. 일부 객실에 설치된 일회용 ‘간이 완강기’마저 대피에 이용되지 못했다. 투숙객들이 사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강기를 비롯해 기본적인 대피 수단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전 연령층이 소방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허망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사를 좌우할 교육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때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그림에도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의 여러 작품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학계도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길고 긴 문학의 침체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내비친다.

대중들이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문학 작품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더 이상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등과 같은 진부한 대답으로는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문학 말고도 더 다양한 문화생활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학만의 ‘흡인력’은 무엇일까.

바로 ‘능동적인 문화생활’이라는 점이다.

문학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건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같은 불편한 특징에서 기인한다. 단순하게 글을 읽는 행위를 넘어 작가가 만든 문장 간의 맥락을 파악해 스스로 소설 속 상황을 그려나가야 한다. 여기서 독자는 영상 매체에서는 느낄 수 없던 아날로그만의 입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문학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축적되면 독자의 가치관도 확장된다. 독자는 살아가면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문학이라는 수단으로 마주한다. 역사를 다루는 소설을 읽었다면,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문학이 품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얻어낸 경험은 독자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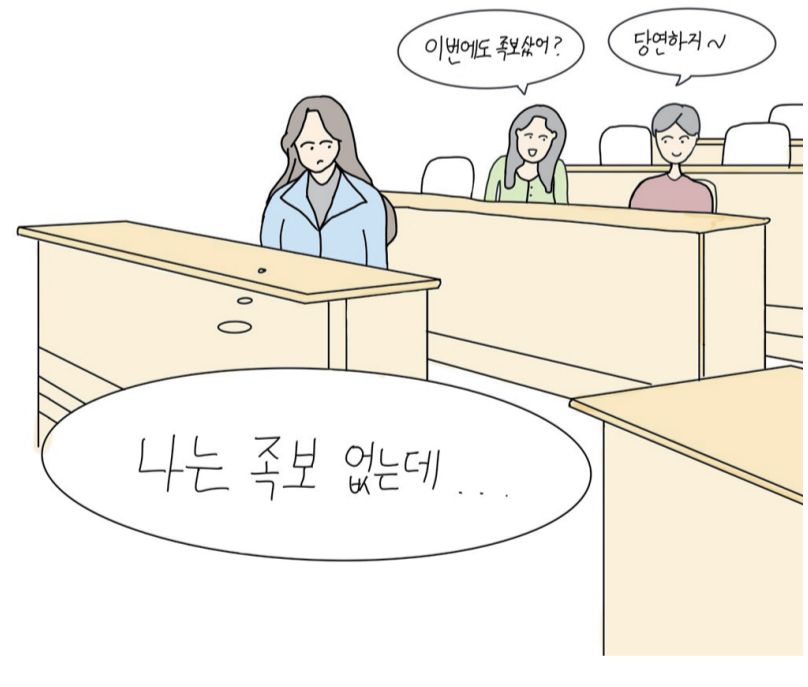
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문학을 통해 생성된 대중의 가치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는 수많은 사람이 이루고 있는 앙상블이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긴다. 문학은 우리가 사회가 마주한 ‘진보와 보수’, ‘남과 여’, ‘청년과 기성세대’ 등 이분법적인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다. 문학을 통해 겪은 폭넓은 경험이 타인을 이해하게 하고 사건을 넓게 보는 시각을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선을 가진 이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허윤호 기자 heo109r@gmail.com

낙산만평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낙산에 올라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AI 기술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부터 대중적으로 상용화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AI가 발전될수록 뒤따라오는 AI 오용 문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의 활용에 관해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AI는 인간과 같은 사고 능력과 행위를 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1947년에 트랜지스터가 상용화되고 컴퓨터의 발전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로 인간의 뇌를 재현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AI가 연구되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AI가 쥐고 있는 양날의 검

AI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안겨주고 있다. ‘ChatGPT’가 대표적인 사례다. ChatGPT는 실시간으로 사람과 유사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질병을 진단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NBC는 7세 알렉스의 사연을 보도했다. 알렉스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으나 전문의들에게 진단을 받아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다. ChatGPT에 그동안 나온 각종 의료 기록을 입력했고 ChatGPT는 ‘지방 척수 수막류’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확인한 결과 이 진단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고, 이후 알렉스는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AI는 때때로 우리에게 부

정적 영향을 떠안겨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 등을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로 예측되는 사람이 ‘AI 윤석열’을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려 문제가 됐다.

그동안 AI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준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만큼 AI는 우리에게 위기와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AI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예림(인문 1)

■ 의화정

지난해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보니 그중 많은 책이 사계절을 다루고 있었다. 우연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계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를 지나가고 있는 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에 관한 책 혹은 계절 그 자체를 주제로 한 책들이었다. 특히 김신지 작가의 『제철 행복』과 오이뮤에서 출판한 『계절의 효능』을 재미있게 읽었고, 예전에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 멘토의 서재에서도 추천했던 엘리 스미스의 계절 4부작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헤르만 헤세의 사계 시리즈를 다시 읽으며 시절의 감수성을 일깨웠다.

우리나라의 장점인 사계절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요즘이지만 계절이야말로 내가

제철의 행복

살고 있는 현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고, 봄에는 만개한 꽃을, 여름에는 무덥지만, 작열하는 태양 아래 빛나는 녹음을, 가을에는 높고 푸른 하늘과 알록달록한 단풍을, 겨울에는 춥지만, 서늘한 공기와 찬란하게 내리는 하얀 눈을 온전히 경험하고 내 마음과 몸의 반응에 집중해 보는 것. 너무나 빠른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따라잡을 수 없이 내게 쏟아지는 정보와 실새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알림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치고 피로하게 만든다.

무렵과 지나간 여름 끝에 드디어 조금씩 느껴지는 가을의 기운이 소중하다. 전자기

기에서 잠시 벗어나 가까운 자연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학교 가까운 곳에는 낙산공원이 있다! 이번 가을에는 석류나 배 같은 제철 과일을 찾아 맛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의 계절인 만큼 긴 호흡이 필요한 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김신지 작가의 『제철 행복』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계절에 무얼 하고 싶은지, 미루지 말고 챙겨야 할 기쁨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지낼 수 있기를”(p. 9). 이번 가을부터는 우리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계절이 주는 행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성(사회과학부) 교수

기자사령

퇴수습기자 임세아(사회과학 3)
이소연(사회과학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김남용 편집국장 김유성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펜 끝에서



펼쳐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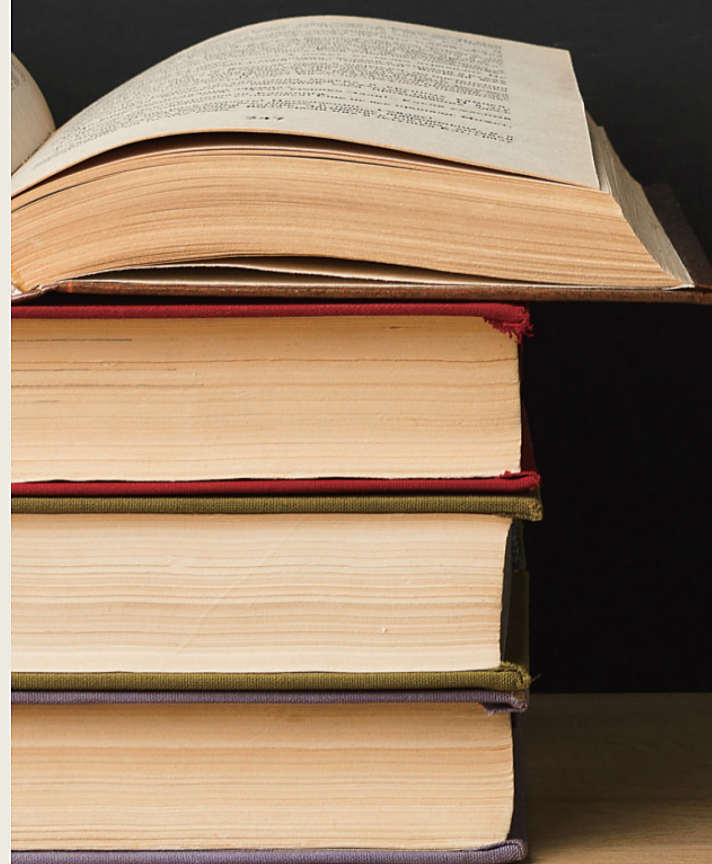


2024/9/23(월)
~10/25(금) 23:59까지

제39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문학의

한 페 이 지



02)760-4186